

테마칼럼

예술로의 초대

이대형 문화장

김고혜에 읽다

경제로 세상보기

10억 先人稅, 한국 출판계 봉 될라



이승우

외국에 한국출판사들이 봉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점이 섭섭하고 화가 나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업적 행위이지 문화적 행위는 아니다. 논의되어야 할 것은, 혹시 상도의나 과잉경쟁에 따른 국가 위신의 실추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

지난 1991년 이상문학상을 받은 조성기의 '우리 시대의 소설가'에는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작가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독자가 나온다. 소설 작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독자가 작가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가, 작가가 환불을 해 줘야 하는가, 하는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 소설이었다. 물론 소설에서 환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환불은 불가하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지도 않는다. 대중소비 사회를 사는 작가의 위상과 면모가 조금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소설가를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우리 시대의 요소들이 제시될 뿐이다. 이를테면 상업주의와 생계 문제, 그리고 이념의 강요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환불을 요구하는 이 엉뚱한 독자의 요구는 주인공인 소설가의 자의식을 일깨우고 반성과 결단을 유도해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환불 요구는 정당한가. 그다지 무리 없는 모범답안을 하나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소설책은 상품이고, 그러므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9천원, 혹은 만원의 정가는 그것이 상품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값은 종이에 인쇄되고 제본되어 유통된, 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물질에 대한 것이지, 그 안에 비물질의 형태로 들어 있는 정신이나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위대한 작가의 소설책이 아니라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심신품이 팜공 같은 책이나 심지어 읽어서 해로운 책까지도, 정가가 정해지는 방식은 같다. 종이의 부피와 인쇄비용과 인건비 같은 것들이 그것들이다.

그러므로 소설책에 대한 환불 요청은 상품으로서의 책에 대해서 가능하고, 작품으로서의 소설을 향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페이지가 빠져 있다든지, 표지가 훼손되었을 때 독자는 소비자로서 상품 생산자인 출판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향해서, 작가에게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은 그가 그 책을 사기 위해 들인 9천원이나 만원이 작품의 값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언히 시간만 아깝다는 독후감을 주는 책에 대해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제목에 속고, 광고에 속고, 매체들의 리뷰에 속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속아 있는데, 방법이 없단 말인가. 안타깝지만 읽기를 중단하고 책을 집어던지는 정도의 화물이 많고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 내생각이다. 제목 선정은 다를 수 있지만, 광고·리뷰·베스트셀러 목록 같은 것은 상품 마케팅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터무니없는 거짓이 아닌 이상 상품 생산자의 마케팅 방법은 인정되어야 한다. 거기다 예술을 상품화한 경우 판단의 객관화가 여간 어렵지 않다.

최근 한 출판사가 일본의 한 작가에게 10억원 이 넘는 선인세를 제공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 10억원이 무슨 값일까. 국내 작가들 가운데 인기 있는 몇몇 사람은 역대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대개 몇백만원 정도에 계약을 한다. 10억과 몇백만원의 차이를 작품(문학성)의 차이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0억 원과 몇백만원의 차이는 작품의 값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다만 상품으로서의 값어치일 뿐이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인데, 수요공급의 법칙이 그것이다. 나는 10억원의 선인세를 주고 그 일본 작가의 작품을 사들인 출판사가 그 소설의 작품성의 값으로 그 돈을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 작품이 훌륭한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읽어 보지 않고 말할 수 없고, 또 설령 읽은 후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차피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10억원의 선인세가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공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소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공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백문이 넘는 국내 작가들과 계약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을 하나의 문학 작품을 사기 위해 쓰고, 외국에 한국출판사들이 봉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점이 섭섭하고 화가 나지만, 분명히 말해서 그것은 하나의 상업적 행위이지 문화적 행위는 아니다. 논의되어야 할 것은, 혹시 상도의나 과잉경쟁에 따른 국가 위신의 실추 같은 것일지 모르겠다. 환불을 요구했던 조성기의 소설 속 인물이 소설가의 자의식을 일깨우고 반성과 결단을 유도해내는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어떤 한국 작가들에게 혹시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시장의 이야기지 문화적 사건은 아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전국 최하위권 지역경제 여건 탓만 할건가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대전·충남에조차 추월당해 전국 최하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성장잠재력이 바다 난 것으로 그간의 지역경제 발전 계획이 성과 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07년 지역 내 총생산(GRDP)은 광주의 경우 21조2천억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꼴찌였다. 대전의 22조1천억원에 뒤진 것이다. 전남 역시 47조2천억원으로 충남의 55조1천억원에 훨씬 못 미쳤다. 2000년 이후 지난 7년간 지역경제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광주·전남은 전국 최하위권인 2.2%, 전남은 중위권인 4.8%로 7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역경제 발전속도가 그만큼 더딘 것이다.

지역경제의 낙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십년 간 이어져 온 지역차별에 의한 산업기반의 열악성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 등 중

양정부의 잘못되고 왜곡된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광주·전남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4.6%, 3.5%로 타시도에 비해 크게 뒤처지 않았음에도 경제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여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지역 내부에 문제점은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지역 세(勢)와 정치권력 면에서 우 리보다 훨씬 열악한 대전·충남의 경제가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제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을 어떤 도시로 키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처럼 여건 타령만 해서는 지역의 한계만 되풀이할 뿐이다. 지역 미래상에 대한 큰 방향부터 재검토하고 내부역량을 키우는 것이 당면 과제다.

남해안 투자 활성화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30일 발표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남해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공원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돼 대형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부산과 목포, 여수에 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유선장 설치허용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해안 지역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자연 경관이 수려한 전남 남해안 일대는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국립공원지역은 기본적인 편의시설 부족이 불가해 비가 세는 노후 주택도 복잡한 행정행위로 방치하는 등 주민 불편은 빚졌다. 각종 공공사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돼 공무원들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뒤늦게나마 전남도와 지역주민들이 절충하게 요구해왔던 각종 규제 완화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방안이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남 해안과 도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관광 기반 확충은 지금까지 나왔던 SOC 사업의 재탕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내의 민간자본 투자가 사회간접자본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관리 대책도 미흡하다. 각종 규제 가 풀림에 따라 개발행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환경보전관리와 점검의무까지 맡게 된다.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환경보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無 等 鼓

1, 2, 3, 4, 5, 6, 7~ 아라비아 숫자의 원주인은 인도인이었다. 이걸 세상에 퍼다 나른 게 아라비아 상인들이라 이틀이 그렇게 알려진 것뿐이다. 하지만 아라비아인은 숫자를 단순한 셈법에서 학문과 과학이라는 영역으로 이끈 공로가 크다. 이유인즉 0의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10, 20, 30 등 자리의 변환만으로 큰 수를 표시하게 한 것도 아라비아숫자의 힘이다.

상형문자를 쓴 이집트인들은 숫자도 사물이나 모습을 빌려 표시했다. 10만은 별, 100만은 놀라는 사람으로 가리켰다. 그런데 큰 수를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한 태양신이 가리키는 숫자는 1000

만이었다. 아마도 거의 무한대수로 생각한 듯하다. 인류역사상 가장 큰 수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은 중국인이다. 일, 십, 백, 천, 만으로 시작해 도저히 셀 수 없는 불가사의, 무량대수로 끝난다. 그렇다만 사람들은 얼마나 큰 수까지 셀 수 있을까. 1억까지만 셀다 해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수십 년은 족히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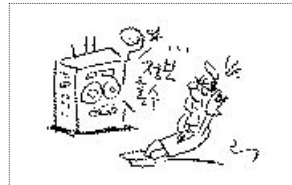
린다. 1억이 이 정도인데 더 큰 수야 말할 나위 없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간이 셀 수 없는 단위의 숫자도 셀 수 있게 됐다. 컴퓨터 단위의 바이트로 환산해 요타바이트(1125조8999억684만2624기가바이트)를 넘어 최근 브르토타이트(1839조2263억5천95만3562기가바이트)까지 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컴퓨터에서는 정보의 양이 커진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축적하는 정보의 연산이 알고 보면 0과 1이라는 단순한 숫자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반도체가 집적화되면 될수록 연산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라진다. 그만큼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제 정보의 홍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보의 쓰나미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더 어울린다. 지식 정보의 무차별 공세에 휩쓸리기 쉽다. 유용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김일환 여흥대부장 kh8@

브르토타이트



기 고



백남선

종 고 칼럼

어려서 처음으로 재미있게 읽었던 이야기에 교과서에 소개된 '토끼와 거북이'가 있다. 이 우화는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 그 맛이 다르게 다가오는데, 어렸을 때는 토끼의 자만심과 거북이의 성실함에 대한 교훈을 받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읽어 보면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경주를 함에 있어서,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의 상대로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고, 거북이는 결승점을 자기의 목

인생이라는 여정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때로는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언덕을 올라야 할 사람들, 비탈을 내려갈 때는 뒤에서 잡아주는 손을 나를 맡겨야 할 텐데, 결코 그들이 나의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만나는 이들은 나에게 동행의 즐거움을 주는 동반자로서 섬리의 축복이다.

삶은 경쟁이 아니고, 그 자체로 목표이다. 삶이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

만남의 축복

표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토끼는 경쟁 지향적이었고, 거북이는 목표 지향적이었다고 할까.

삶이라는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여정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치고, 나의 삶에 놓여있는 일들을 겪는 동안에 삶이라는 여정이 짜여 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추억은 어떠한가? 여행이라는 목표를 제쳐 두고, 순간 순간에 만났던 이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묻는다. 이 물음은 앞으로 만날 이들에 대한 나의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만날 이들에게는 예전처럼 대할 수 없는 것이다.

때, 그의 인생은 황폐하게 되고 만다. 성경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임으로 가정과 그 인생에 비극이 왔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축복인데, 그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에 자신이 먼저 고립되게 된다. 우리는 사람을 만남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 중에는 생각했던 이들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들도 만날 것이다.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 경쟁자가 아닌 삶의 희로애락을 서로 나누는 꼭 필요한 사람들과 즉 잘되면 손뼉치고 축하하고 그가 곤경에 처해 있다면, 끌어내서 세워주는 대인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미문교회 목사)

농촌 독거노인 돕기 자원봉사 캠페인 펼칠 때

신문을 읽다 보면 농촌의 노인들이 홀로 생활하다 숨진지 며칠이 지나 발견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농촌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부양할 자식이 없는 농촌의 독거노인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돌보아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이의 해결책 중 하나가 민간인 자원봉사 활동이다. 도시인들중에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도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농촌의 홀로된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요일별로 정기적으로 안부인사 드리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한달에 한번이라도 찾아 뵙고 안부를 묻는다면 정말 농촌의 노인이 사랑한 지 며칠 만에 발견되는 우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농촌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인들은 웰빙 건강과 보람을 찾고, 독거노인은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 행복할 수 있도록 도시 자원봉사자들이 농촌의 독거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매결연 맺는 운동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언론에서 그런 운동을 유도하고 캠페인도 벌여서 농촌의 노인들이 혼자 외롭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광양항의 올해 물동량은 68.5만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4만TEU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환적물량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정부가 부산항과 광양항을 한국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투-포트(Two-Port)시스템이 붕괴로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광양항의 생존·발전을 위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가야 한다. 예를들어 화해도 컨테이너로 수송한다는 점을 감안, 배후지에 화물 가공공장이나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을 유치해 화물을 창출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투-포트 체제가 사라지면서 부산항과 컨테이너 화물 유치경쟁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컨테이너 화물 외에 벌크화물, 곡물(양곡), 목재, 고철, 간단한 선내수리업 무까지도 다양하게 검토해 혁신과 차별화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제언

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광양항이 컨테이너화물만 취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취급함으로써 다목적 항만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첫째, 광양항 로컬화물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대응이 절실하다. 다시 말해 광양항 관련 유관기관, 부두운영사, 선사 등이 공동 협력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광양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포워드 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부두 내 CFS창고 및 환금물류센터 활용하는 LCL컨솔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CFS창고 및 환금물류센터를 소량화물 전용창고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LCL 화물들을 광양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산도,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 컨테이너 부두공단, 지역사회가 높은 관심을 갖고 항만 활성화 방안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시켜 로컬화물물 창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화물을 창출해야 한다. 앞으로 광양항이 생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항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화물을 유치하고 또 시설을 특화해 항만을 차별화해 나

마지막으로, 화물 창출을 위한 수출용 산단 개발이 시급하다. 광양항이 개장된 지 벌써 몇년이 지났지만 인근 산단 개발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광양항이 물동량 200만TEU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단순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에만 의존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만 배후단지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공공업체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화물량이 늘어나면 광양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사 및 화주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광양항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지역 내 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인근지역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국내외 업체들의 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의 작동이 가능할 것이다.

광양항 개장 이래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온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은 당연히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할 것이나 피나는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광양항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주위여건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방안과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끌어낼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정책부장>

◇ 채택된 원고도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도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